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 2016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 감소

Executive Summary

□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 개 요

연간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의 유동성제약 완화 효과와 채무부담 증대 효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가계부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경로

1) 가계부채의 두 파급 경로

가계부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경로는 유동성제약 완화 경로와 채무부담 증대 경로로 분류할 수 있다. 유동성제약 완화 경로는 현재의 자산을 증가시켜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의미하며 채무부담 증대 경로는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소비여력을 축소시켜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 경제 및 경제주체의 상황에 따라 유동성완화 경로와 채무부담 증대 경로의 강도가 달라지며 두 경로의 상대적 강도에 따라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총효과의 방향과 크기가 결정된다.

2) 유동성제약 완화에 의한 소비 증대 효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차입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역대 최저의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차입비용이 하락하여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가계부채의 유동성제약 완화 효과 또한 강화되었다.

생활비, 의료, 교육 등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의 비중은 가계소득이 정체되는 시기에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5년에 가계소득이 정체되면서 소비 목적의 대출이 증가했으며 향후 저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정체 우려로 이러한 소비 목적의 대출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채무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

가계의 채무부담의 크기를 나타내는 $DSR(\frac{\text{원리금상환액}}{\text{가처분소득}})$ 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 계층에서 DSR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가구의 절반 이상이 채무부담으로 소비를 감축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가구에서 채무부담으로 소비지출에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원금분할상환 가구의 경우 이자만 상환하는 가구에 비해 평균 소

비성향($\frac{\text{소비지출액}}{\text{가처분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17년까지 분할상환으로의 유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개선되나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전망

향후 소득성장의 정체로 인해 채무부담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치를 이용한 예측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소비 성장률에 대한 가계부채의 총효과가 음(-)으로 전환되고 2017년에는 소비 성장률을 0.63%p 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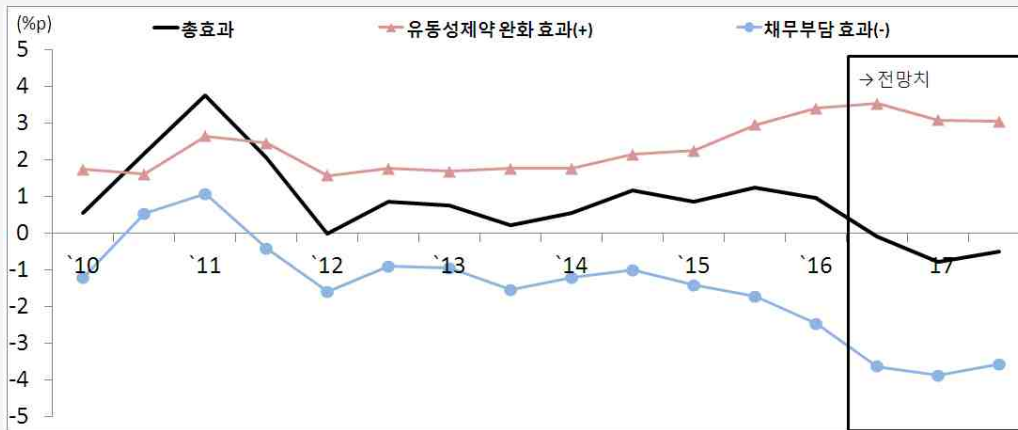
< 가계부채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총효과 전망 >

(%p)

시기	2016년		2017년	
	하반	상반	하반	연간
총효과	-0.07	-0.78	-0.49	-0.6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 가계부채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효과 및 전망(반기 단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2016년 하반기부터는 전망치.

■ 시사점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 둘째,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연착륙 및 소득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채무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1. 개요

○ (현황)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채무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 제약 우려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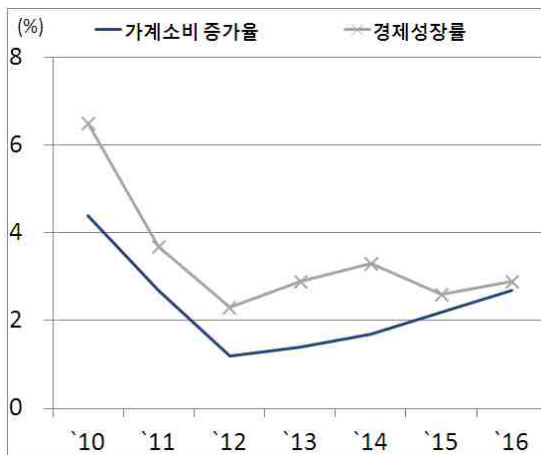
-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

- 2016년 3분기까지의 가계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7%로 동기간의 경제성장률 2.9%를 하회하는 등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추세가 지속
- 현대경제연구원(2016b)의 전망에 따르면 2017년에는 소비 증가율이 2.0%로 다소 회복을 보이나 여전히 경제성장률 2.6%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어 채무부담 증대에 의한 소비 제약 우려가 확대

- 2016년 2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1,257.3조원으로 1분기 대비 33.6조원 증가했으며 전년 동분기 대비 11.1% 증가
-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

< 경제성장률 및 가계소비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 주 1) 전년 대비 증가율.
2) 2016년은 1~3분기 전년 대비 증가율.

< 가계 처분가능소득 및 가계부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주 1) 전년 대비 증가율.
2) 2016년 1분기는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금융안정보고서, 2016년 6월).

- (선행연구)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유동성제약 완화에 의한 소비 증대 효과와 채무부담 증대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의 양방향의 효과가 혼재
 - 가계부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현재의 자산증가를 통한 소비 증대 효과와 부채에 따른 채무부담 증대로 인한 소비 감소 효과의 양방향의 효과가 동시에 발생
 - 유동성제약 완화 효과는 부채를 통해 미래의 소득을 미리 사용해 현재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의미하며 소비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 채무부담 증대 효과는 소득의 일부를 원리금상환에 지출하게 되면서 소비 지출여력이 감소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유동성제약 완화로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지나 특정 임계점(threshold)을 상회할 경우 채무부담 증대 효과가 강화되어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됨
 - 손종철·최영주(2015)의 연구에서는 가계부채는 유동성제약 완화 효과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지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9~2.4배를 상회하는 경우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행(2012)에서는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2.51%를 상회하는 경우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국가 및 경제주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의 유동성제약 완화 효과와 채무부담 증대 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총효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제약 완화 효과와 채무부담 증대 효과의 양방향의 효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2. 가계부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경로

1) 가계부채의 두 파급 경로

○ 가계부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동성제약 완화 경로(+)**와 **채무부담 증대 경로(-)**가 존재

- 유동성제약 완화 경로는 현재의 자산 증가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 저금리 기조로 인한 차입비용 감소로 대출총량이 증가하면서 경제주체의 소비구매력을 증가시켜 부채가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 발생
 - 저성장으로 가계의 소득 성장이 부진한 시기에 경제주체는 생활 목적의 대출을 통해 소비구매력을 보충하면서 부채가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 발생
- 채무부담 증대 경로는 원리금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여력을 축소시켜 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 부채총량의 증가로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대되는 가운데 가계 소득 성장의 부진이 겹치면서 $DSR(\frac{\text{원리금상환액}}{\text{가처분소득}})$ 이 증가하고 채무부담에 의해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 발생
 -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동시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 발생
- 유동성제약 완화 경로(+)와 채무부담 증대 경로(-)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총효과의 크기가 결정
 - 가계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유동성제약 완화 경로가 채무부담 증대 경로를 압도하여 총효과가 양(+)일 것으로 판단
 - 부채총량이 과대해지거나 소득의 부진으로 소비여력이 제약받을 경우 채무부담 증대 경로가 유동성제약 완화 경로를 압도하여 총효과가 음(-)이 될 것으로 예상

< 가계부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경로 >

유동성제약 완화 경로(+)	차입비용 감소	저금리 기조 → 차입비용 감소 → 대출량 증가 → 소비구 매력 증가 → 소비 증가
	생활 목적 대출 증가	저성장 → 가계의 소득 성장 부진 → 소비 목적 대출 증가 → 소비 증가
채무부담 증대 경로(-)	DSR 상승	부채 증가 →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 DSR 상승 → 소비 구매력 위축 → 소비 감소
	분할상환 대출 증가	정부의 정책으로 분할상환 대출 비중 증가 →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 소비구매력 위축 → 소비 감소

2) 유동성제약 완화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

○ 저금리 기조에 따른 차입금리 하락세로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이 감소하면서 대출수요가 증가

-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

- 기준금리는 2012년 7월까지 3.25%를 기록했으나 경기 회복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됨
- 2016년 11월 현재 기준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 저금리 기조에 따라 가계 차입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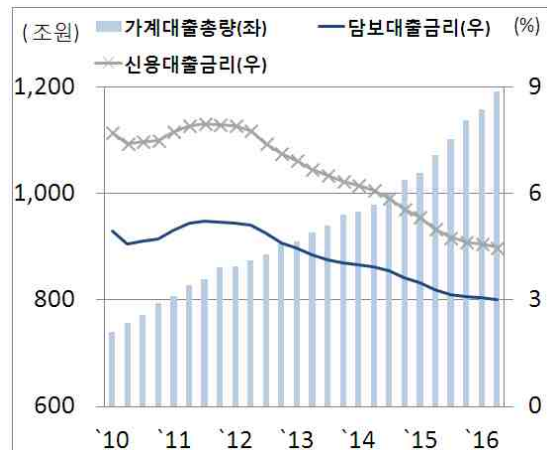
- 2012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 정책에 따라 대출금리가 하락
- 2016년 2분기 현재 신규 가계대출에 대한 가중평균금리는 3.1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대출에 대한 비용이 낮아지면서 대출량이 급증
-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증가속도(전년 동분기 대비)는 빨라지고 있으며 2015년 3분기부터는 10%를 초과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자료 : 한국은행.

< 가계대출 및 가계대출 금리 >



자료 : 한국은행.

- 주 1) 가계대출총량은 판매신용 제외.
- 2)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 생활비, 의료 등 소비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소비 목적 대출의 비중이 증가하여 유동성제약 완화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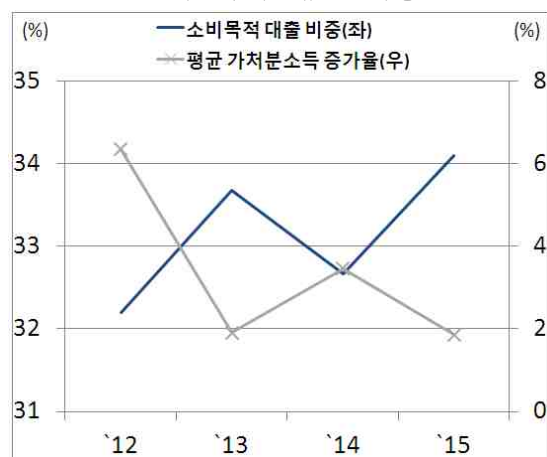
- 소비 목적 대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부채의 소비 증대 효과가 강화
 - 신용대출 용도 중 결혼자금, 의료, 교육, 생활비, 기타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소비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¹⁾
 -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비 목적의 대출 비중이 크며 타 계층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부채의 유동성제약 완화 효과가 큼을 시사
 - 최근 소득 5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비 목적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소비 증대 효과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소득 증가율이 정체되는 시기에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가구당 가처분소득 증가율과 소비 목적 대출 비중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주체가 소득이 하락하는 시기에 부채를 통해 부족해진 소비여력을 보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대경제연구원(2016b)의 전망에서 2017년 경제성장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소비 목적 대출 비중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소득분위별 신용대출 중 소비 목적 대출 비중 (%) >

	'12	'13	'14	'15
전체	32.2	33.7	32.7	34.1
소득 1분위	46.6	43.9	46.1	51.3
소득 2분위	34.9	42.2	42.7	40.6
소득 3분위	35.8	40.6	37.5	45.6
소득 4분위	31.9	32.3	32.2	34.7
소득 5분위	27.8	27.2	26.1	26.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재구성.
 2) 신용대출 중 결혼자금, 의료, 교육, 생활비, 기타 목적의 대출의 비중.

< 가처분소득 증가율 및 소비 목적 대출 비중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1) 신용대출의 대출용도 중 소비보다는 투자의 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부동산 및 증권투자, 사업자금과 부채상환, 전·월세 보증금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대출용도.

3) 채무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

○ $DSR(\frac{\text{원리금상환액}}{\text{가처분소득}})$ 이 증가하고 있어 가구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부채가구의 절반 이상이 채무부담으로 지출을 감축

- 2012년 이후 전 소득분위에서 DSR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빠른 증가를 보임
 - 전체 가구의 DSR은 2012년 17.1%에서 2015년 24.3%로 증가하는 추세
 - 동기간 소득 1, 2분위의 DSR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소득 4, 5분위의 가처분소득의 성장이 지연되면서 DSR이 빠르게 증가함
 -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채무부담이 가중
- 부채보유 가구 중 50% 이상의 가구에서 채무부담으로 소비 지출을 감축하고 있으며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그 비중이 높음
 - 2015년 부채보유 가구 중 채무부담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55.2%로 2012년의 54.3%에 비해 다소 증가
 -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소비 지출을 감축한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2015년 소득 5분위에서도 43.1%의 가구에서 지출을 줄였다고 응답

< 소득분위별 DSR >

(%)

	'12	'13	'14	'15
전체	17.1	19.1	21.7	24.3
소득 1분위	16.0	16.7	24.1	25.2
소득 2분위	16.4	21.2	24.2	27.8
소득 3분위	18.8	19.7	24.5	24.8
소득 4분위	16.7	19.6	21.2	25.3
소득 5분위	17.1	18.3	20.3	22.6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지출을 감축한 가구의 비중²⁾ >

(%)

	'12	'13	'14	'15
전체	54.3	56.5	57.0	55.2
소득 1분위	67.3	65.6	65.1	63.5
소득 2분위	60.6	64.4	63.3	64.0
소득 3분위	60.6	58.9	60.6	57.9
소득 4분위	51.6	55.9	56.7	54.8
소득 5분위	41.3	44.8	45.5	43.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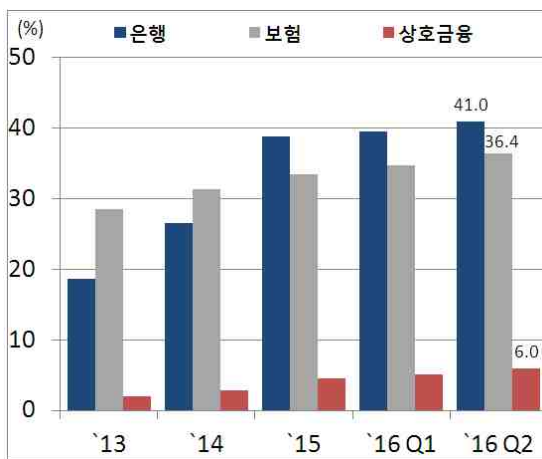
2) 부채보유가구 중 채무부담으로 지출을 감축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

2)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가구는 지출을 감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정착 유도로 분할상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금 동시 상환에 따른 부담으로 소비가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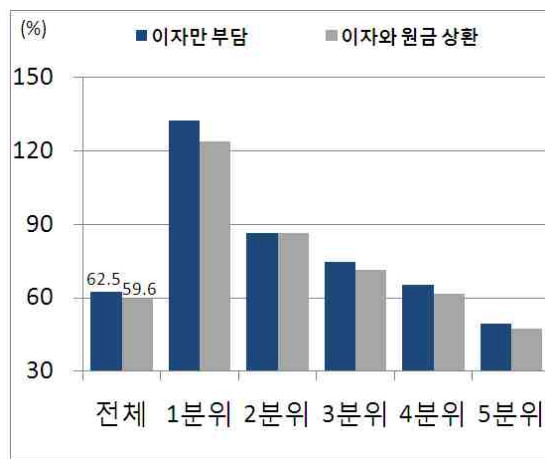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의 분할상환 정착 유도로 분할상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61.8%(2016년 2분기, 예금취급기관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보험·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제시하고 확대를 유도
 - 주택담보대출의 79.7%(2016년 2분기, 예금취급기관 기준)을 차지하는 은행권의 경우 분할상환 비중이 2010년 6.4%에서 2016년 2분기 41.0%로 증가했으며 2017년 5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자만 부담하는 가구보다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부담하는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frac{\text{소비지출액}}{\text{가처분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분할상환 비중 추가 확대 시 소비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 존재
 - 부채보유 가구 중 이자만 부담하는 가구에 비해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가구에서 평균 소비성향이 낮음
 - 금융위원회는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2017년까지 추가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로 인한 소비 침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 >



자료 : 금융위원회.

< 원금부담여부별 평균 소비성향³⁾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년 자료를 재구성.

3)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년 조사자료는 2014년의 소득 및 소비활동을 반영.
4) 가계동향조사 기준 2014년 평균 소비성향은 72.9%이며 본 분석상 평균 소비성향과의 차이는 두 조사 간 표본 추출방식 차이와 분석 대상을 부채보유 가구로 제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3.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전망

1) 전망의 가정

○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현대경제연구원의 가계부채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용

- 2016~2017년 GNI 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및 가계부채 증가율의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2016a, 2016b)를 참고

- 가계부채 증가율의 전망치는 2016년 하반기에는 10.6%, 2017년에는 9.8%⁵⁾
- 현대경제연구원(2016b)의 GDP 및 CPI 증가율 전망치에 GDP-GNI 성장률 격차 및 CPI-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격차의 최근 5년간 평균을 이용하여 조정

2) 모형

○ 기존 가계부채 및 소비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가계소비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

- 종속변수는 가계소비 증가율, 설명변수로 GNI 증가율, 가계부채 증가율, 소득 대비 부채비율 증가분, 시장금리 증가분을 이용하여 분석

- 2002년 4분기~2016년 2분기의 분기별 시계열 자료 이용
- 가계부채 증가율은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증가율을 이용했으며 소비 증가율은 비영리단체의 소비를 제외한 가계소비를 이용
-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각 명목변수를 실질화

- 유동성제약 완화 효과(소비 증대 효과)와 채무부담 증대 효과(소비 감소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

- 유동성제약 완화 효과는 실질 가계부채 증가율로 측정했으며 채무부담 증대 효과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변동분으로 측정
- 총효과는 각 시기의 부채총량 및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5) 현대경제연구원(2016a)의 전망치는 판매신용이 포함된 가계신용이 기준인데 반해 본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변수는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로 두 변수간 차이가 존재하나 판매신용이 가계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므로 두 변수의 증가율은 동일하다고 가정.

3) 전망

○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총효과는 소득 부진과 가계부채 누적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음(-)으로 전환되며 2017년에 가계부채가 가계소비 증가율을 0.63%p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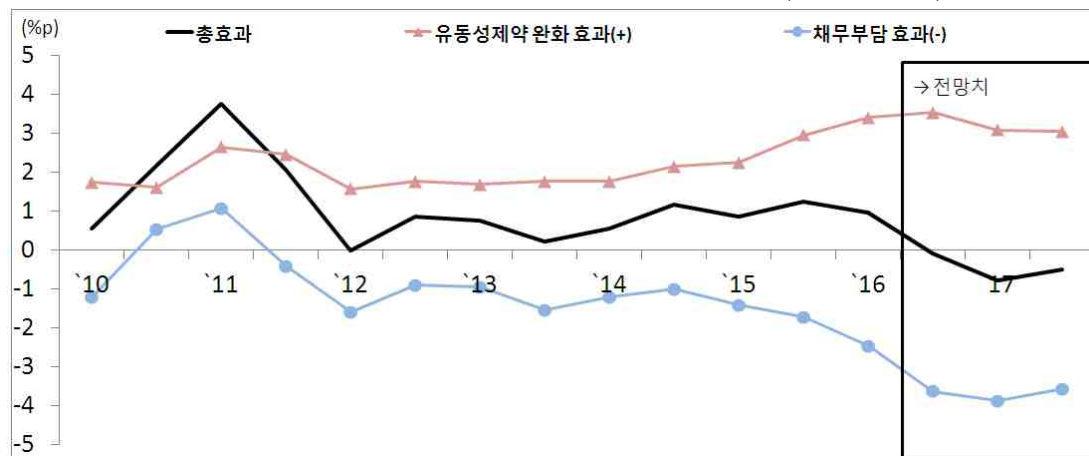
- 소득 부진과 가계부채 누적으로 채무부담 증대 효과가 강화되어 2016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하반기부터 GNI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채무부담 증대 효과가 강화되었으며 2016년 하반기부터 총효과가 음(-)으로 전환될 전망
 - 2017년 가계부채에 의한 소비 제약 효과는 0.63%p로 향후 채무부담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현대경제연구원(2016b)에 따르면 2017년에는 유가 및 환율 상승이 전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GNI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경우⁶⁾ 본 전망보다 더 큰 폭으로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도 존재함

< 가계부채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총효과 전망 >

		(%p)		
시기	2016년	2017년		연간
	하반	상반	하반	
총효과	-0.07	-0.78	-0.49	-0.6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 가계부채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효과 및 전망(반기 단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2016년 하반기부터는 전망치.

6) 국민총소득(GNI)은 교역조건(수입품 대비 수출품의 가격비율)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유가 및 환율의 상승은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GNI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4. 시사점

○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최근 국내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방지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향후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다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급격하고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실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단계적 시행 및 과열 지역에 대한 차등 적용 등 세밀한 정책 대응이 요구

둘째,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지속하여 채무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 집담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투기성 대출로 인한 채무부담의 급증을 막고 중금리 대출 및 전환대출을 활성화하여 고금리로 인한 채무부담을 경감
-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부채의 건전성을 개선하고 금리 인상 시 채무부담 급등을 방지
- 분할상환 대출의 확대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개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분할상환 대출 확대가 소비를 침체시킬 가능성을 감안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

셋째,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가계부채의 연착륙 및 가계소득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 가계부채에 대한 급격한 억제로 성장잠재력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점진적, 단계별 연착륙 유도
- 주거비, 공공요금 등 비소비지출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소비여력을 증대

넷째, 소비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저소득층은 채무부담이 크고 소비 목적의 대출비중이 높은 등 소비여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평균 소비성향이 높아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소비 촉진에 효과적
-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및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소비를 촉진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하여 부채의 유동성제약 완화 효과를 강화하고 고금리로 인한 채무부담을 경감 **HRI**

조규림 선임 연구원 (2072-6240, jogyurim@hri.co.kr)
김수형 연구원 (2072-6217, soohyung@hri.co.kr)

< 참고문헌 >

1. 손종칠 외(2015), “가구패널을 이용한 과다부채와 소비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1), 133-144.
2.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5년 자료.
3. 한국은행(2012),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4. 한국은행(2016), “금융안정보고서”, 2016년 6월.
5. 현대경제연구원(2016a), “국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및 전망”, 현안과 과제 16-42호.
6. 현대경제연구원(2016b), “2017년 한국 경제 전망”, 경제주평 16-37 통권 710호.